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국제관계: THAAD 배치의 정치동학*

이기완**

I. 서론
II.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III.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능력과 실태
IV. THAAD 배치를 둘러싼 정치적 의도
V. 한국의 선택과 대응
VI. 결론 |
|--|

주제어: 사드, 전략적 모호성, 포기와 연루, 동맹, 패권 경쟁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 내 THAAD 배치의 원인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의 교차점에서 찾고, 이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동향과 한국의 선택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이 THAAD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했던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일종의 '사고 정지의 외교'에서 비롯되었고, 미중 양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적대 게임'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며, 평가르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중 양국과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갈등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를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 『국제관계연구』 제21권 제2호 (2016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16.12.21.2.5>

* 이 논문은 2015~2016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I. 서론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 시험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중 간의 뜨거운 외교적 쟁점으로 대두된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는 7월 8일 한국이 이를 전격 배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내 THAAD 배치를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 거점 구축의 일환으로 간주해, 한국 내 THAAD 배치가 자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 측에 THAAD 배치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파괴된다”고 까지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칼럼을 통해 “한미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긴장국면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엄중히 훼손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¹⁾ 이러한 이면에는 THAAD 레이더(AN/TRY-2)의 탐지능력이 ‘전진모드(FBM: Forward-Based Mode)’ 방식으로 설정되면 최대 2,000km에 이르기 때문에 중국의 상당수 전략 자산이 THAAD 레이더에 노출되어 미중 간 핵전력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의 우주궤도 진입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향후 2~3년 내에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의 궤도 재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THAAD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내지 우보전략(牛步戰略)을 취했던 것은 한편으로 전후부터 지속되어온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유지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해결사’ 역할 기대 등을 고려했던 것에 기인한다.²⁾

1) 『아주신문』, 2016년 10월 3일.

그런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의 하위체계로 전략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미중 양국으로부터 강한 의구심과 함께 THAAD 딜레마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이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일종의 ‘사고 정지의 외교’ 위에서 THAAD 문제에 서투르게 다루면서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THAAD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초래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THAAD 배치가 불가피하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미국 주도의 논의에 수동적으로 편승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모호성 전략과 함께 ‘불시 결정’은 THAAD 배치를 둘러싼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주변국 외교와 나아가 북핵 문제의 해결을 한층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THAAD 배치를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북한도 이러한 한·미·중 간 갈등 공간을 비집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한국 내 THAAD 배치의 원인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의 교차점에서 찾고, 이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동향과 한국의 선택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THAAD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의 선택과 대응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정부가 미중 양국과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틈새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박휘락,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 논란이 갖는 의미,” 『국제관계연구』 제21권 제1호 (일민 국제관계연구원, 2016), p. 35.

II.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냉전 종식에 의해 동서진영 간의 군사적 대립은 소멸했지만,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와 다양한 핵 투발 능력의 보유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는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요인의 증대와 함께 중국 국력의 급성장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체제의 대립구도를 한층 경직시키고 있다. 미국은 탈냉전 초기까지만 해도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패권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었지만, 경제적 급성장 속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굴기(屈起)하는 중국의 현실을 묵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2015년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두고 미중 간 세력 전이 현상의 전조라고 말하는 논자도 있다.

이러한 동향은 북핵 문제,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 간 사사건건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와 아태 지역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두와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 심화라는 이중적 현실이 한국으로 하여금 미중 양국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³⁾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느 한 국가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게 되면,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포기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 자율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는 동맹국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이익의 교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의

3) Michael Mandelbaum, *The Nuclear Revolution: International Politics Before and After Hiroshim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51-152.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외교 주권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약소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안보 위협이 현저히 낮은 단계라면 동맹의 논리보다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balancing) 정책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안보적 위협이 국가의 생존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군사력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루와 편승(bandwagoning) 정책을 통해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약소국은 자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좋든 싫든 간에 동맹국의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게 되며, 이것이 강대국 간의 ‘적대 게임’에 직면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초래된 한국의 안보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에 의한 THAAD 배치 결정은 미중 양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서 본질이 왜곡되는 것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자위적 조치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격상되었던 것이다.⁵⁾

한편 강대국은 자국이 추진하는 세계전략구상이나 안보전략에서 동맹 약소국이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동맹 약소국과 동맹관계를 쉽게 해소하지는 않는다. 로스틴(Robert L. Rothstein)이 언급한 바 있듯이 강대국은 국제체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체결하지만, 약소국은 자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동맹을 체결한다.⁶⁾

이 때문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는 공통 목표와 위협 인식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동맹국 간 ‘상대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동맹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맹 해소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지만 동맹 강대

4)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 484.

5) 구본학,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화,” 『신아세아』 제22권 제4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p. 152.

6) Robert L. Rothstein, *Alliances and Small Pow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21.

국은 자국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 동맹 약소국에 의해 저지되거나 또는 약소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위상 강화에 악용되어 무산될 때, 동맹관계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한다.⁷⁾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제체제의 대립구도가 경직될 때 심화되는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는 약소국이 독자적인 방위를 통해 안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므로 단지 ‘관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⁸⁾ 그런데 약소국은 평시의 경우에는 동맹 정책에 반발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지만,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동맹국의 정책에 연루되거나 편승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곤 한다.

III.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능력과 실태

북한의 핵위협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로 시작되어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으로 고조되다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그리고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으로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다.

1993년 3월에 시작된 제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6월 북한의 IAEA의 탈퇴 선언으로 고조되었지만, 북미 양국이 10월 21일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기로 한 국제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혹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은 2002년 10월 켈리(James Kelly) 미 국무차관보의 북한 방문 때,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KEDO는 2002년 11월 대북 중유 공급 중단을 결정했고, 이에 북한이 2003년 1월 NPT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하면서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⁹⁾

7)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p. 161.

8) Glenn H. Snyder,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No. 1 (1990), p. 113; 이수형, “동맹의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국제정치논총』 제 39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p. 25.

〈표 1〉 북한의 핵실험 추이

구분	제1차 핵실험	제2차 핵실험	제3차 핵실험	제4차 핵실험	제5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2006.7.5 대포동 미사일	2009.4.5 광명성 2호	2012.12.12 광명성 3호	2015.12.21 SLBM 발사	2016.8.24 SLBM 발사 성공
연도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출처: “‘北 핵실험’ 10년, 핵보유국 눈앞 … 우리 대응체계는?” 『뉴스 1』, 2016년 10월 6일

2003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6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협상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를 선언했고, 더 나아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패 직후인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¹⁰⁾ 그리고 2016년 1월 6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다시 9월 9일에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북핵 실험과 관련하여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¹¹⁾ 특히 제4차 핵실험과 제5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핵무기의 소형화가 상당 정도 진전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한미 당국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제5차 핵실험은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일반적으로 핵탄두의 소형화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t 내외에 이르면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북한의 주장대로 1t 정도로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이러한 핵탄두는

9) 이기완, “동아시아 안보에서의 초국가적 위협,” 『국제정치연구』 제16집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pp. 60-61.

10) 김병남, 『안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2011), p. 80.

11) “北, 김정은 지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 『뉴스 1』, 2016년 7월 12일.

〈표 2〉 국가별 핵무기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 그리고 소형화의 기준

구분	핵실험	핵탄두 소형화	소형화 기간	소형화 수준
미국	1945년	1952년	7년	110kg
소련	1949년	1955년	6년	255kg
영국	1952년	1959년	7년	350kg
프랑스	1960년	1962년	2년	500kg
중국	1964년	1966년	2년	600kg
북한	2006년	2016년	10년	1톤

출처: “북한 소형화된 핵탄두 무게는 얼마?” 『헤럴드경제』, 2016년 3월 10일

사거리 300~700km인 스커드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핵무기 개발 후 핵탄두 소형화에 걸린 기간이 대략 2년에서 7년 내외인 것을 고려해볼 때, 북한도 핵탄두 소형화의 완성 단계에 거의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과 함께 다양한 핵 투발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고 있는 스커드미사일이 있다. 스커드미사일은 비무장 지대 북쪽으로 50~90km 구간에 배치되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사거리가 300~700km로 다양하며 그 성능 또한 대단히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로, 노동미사일이다. 노동미사일은 비무장 지대 북쪽으로 90~120km 구

〈표 3〉 북한 미사일 종류와 핵탄두 장착 여부

구분	스커드-B	스커드-C	노동	무수단	SLBM	KN-08
사거리	300	500	1,200	3,500	2,400	12,000
탄두중량	1,000kg	770kg	700kg	650kg	650kg	500kg
직경	88m	88m	1m	1.5m	1.5m	2m

출처: “북한 주요 미사일 현황,” 『연합뉴스』, 2016년 7월 8일

간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가 1,200~1,300km로 주일미군을 타격권에 두고 있다. 세 번째로, 무수단미사일이다. 무수단미사일은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175km 구간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 3,000km로 광의 미군 기지를 타격권에 두고 있다. 네 번째로, KN-08이다. KN-08은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은 없지만,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사거리가 적어도 5,470km~12,000km로 미국 동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제4차 핵실험과 거의 보조를 맞추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3월 10일에 스킨드-C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18일에는 평안남도 속천에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또한 21일에는 동해상으로 KN-09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 김정은은 3월 15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모의실험 과정을 공개했다. 더욱이 6월 22일에는 무수단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¹²⁾

이러한 북한의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문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의 성공 여부와 함께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우선 북한은 2015년 5월과 12월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2016년 4월 24일, 8월 24일에도 실시되었다. 특히 북한의 주장대로 8월 24일 발사 시험을 계기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THAAD 배치의 ‘효용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중으로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12) 『동아일보』, 2016년 3월 16일.

IV. THAAD 배치를 둘러싼 정치적 의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증하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와 핵 투발 능력의 다양화가 국제사회의 예상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위협 인식이 한국 내 THAAD 배치에 불을 지폈다. 그런데 문제는 THAAD 배치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적 위협 차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의 일환으로 부각되기보다는 동북아 지역에서 지역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의 하위체계’로 변질되어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1. 중국의 입장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1993년 3월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줄곧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중국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해 왔다. 중국은 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와 다양한 핵 투발 능력 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을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대미 억지력 확보를 위한 완충지대이며 한미일 남방 3각 관계에 의한 대중 봉쇄 라인의 최전선으로 간주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보이지 않는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론’과 ‘자산론’의 딜레마이며,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안보전략을 추구하면서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거듭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중국이 기대했던 예측과는 달리 한국이 THAAD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한중 관계 및 미중 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내 THAAD 배치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방 확대 수단’으로 간주했다. 즉, 중국은 THAAD가 한국 내에 배치되면 THAAD 레이더에 의해 자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 이면에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강한 불신과 함께

양국 간 패권 경쟁이 깊게 깔려 있다. 중국은 미국 측의 주장과는 달리 종말단계 요격용 모드(TM: Terminal Mode)로 설정된 THAAD 레이더가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전진배치 모드(FBM)로 전환될 수 있어 유사시 미중 간 핵전력 균형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³⁾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를 구실삼아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MD 체계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국의 핵억제 태세 내지 미국에 대한 보복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THAAD의 최대 요격 사거리가 최대 200km이고, 고도 150km 이기 때문에 1,00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중국의 핵탄두미사일을 한반도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¹⁴⁾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 중국이 한국 내 THAAD 배치에 반대했던 것은 자국과 해양 영유권 분쟁을 안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미국 주도의 지역 MD 체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중국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¹⁵⁾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왔으며, 특히 2014년 11월에 한중 FTA를 타결하고 2015년 3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에 가입할 정도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중국-소 한국’이라는 인식 틀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간주해 왔으며,¹⁶⁾ 이러한 인식이 THAAD 문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중국은 “한국이 THAAD를 배치하면 결과적으로 미중 양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바둑돌’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¹⁷⁾

13) 이기완, “THAAD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국제정치연구』 제18집 제1호(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15), pp. 7-8; 『한겨레』, 2015년 6월 3일.

14) 신영순, “THAAD논쟁에 얽힌 허와 실,” 『국가안보전략』 제15권(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p. 27.

15) 박병광, “中, 한반도 사드 배치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로 인식?” 『통일한국』 제387권(평화문제연구소, 2016), p. 30.

16) 고성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국가전략』 제12권 제4호(세종연구소, 2006), pp. 106-119.

17) 『環球時報』, 2016년 2월 16일;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중국은 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민감한가?” 『통일경제』 제2016권 제3호(2016), p. 37.

중국은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3NO 정책’을 부각시킴으로써 우호적인 한미동맹관계에 파열음을 내는 동시에 한국 내 갈등을 촉발시켜 중국적으로 한미동맹으로부터 한국을 점진적으로 이탈시키려고 했던 것이다.¹⁸⁾ 또한 중국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 삼아 대북 공조체제의 일환으로 THAAD를 배치하게 되면, 이것이 역으로 북한을 ‘벼랑끝 전술’로 내몰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여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자국도 심각한 안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보았다.

더욱이 중국은 전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로 인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자국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견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이완시키는 동시에 한미일 군사공조체제의 형성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¹⁹⁾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한국이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내 THAAD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외상’을 입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한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면서 취해 왔던 외교적 행보가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2. 미국의 입장

1998년 8월 30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빠르게 증대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국이 주도하는 지역 MD 체제 참여를 간헐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와 더불어 다양한 핵 투발 능력의 보유는 지금까지 자국이 주도하는 MD 체제

18) 우정엽, “사드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JPI Peace Net』 제2015-05 (제주평화연구원, 2015).

19) 이기완 (2015), pp. 6-8.

편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한국에 대해 THAAD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호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이 최근 무수단미사일의 고각 발사 실험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공개하면서, 비록 정상적으로 실험을 실시했는지의 진위 여부를 떠나, 한국 내 자국 시설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THAAD 배치의 명분이 되었다.²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국 내 THAAD 배치는 일차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통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환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¹⁾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내 THAAD 배치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그것보다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구실삼아 한국을 압박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THAAD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THAAD 레이더를 종말모드로 고정하게 되면 그 탐지거리가 600km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자산이 THAAD 레이더에 그대로 노출될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THAAD 레이더를 종말모드에서 전진배치용 요격 모드로 전환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 내 THAAD 배치가 현실적으로 자국의 군사적 확장을 막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군사위성 내지 첩보위성을 통해 이미 공공연하게 다른 국가의 핵심 군사 시설을 볼 수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내 THAAD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또 다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²²⁾

더욱이 미국은 탐지거리가 짧은 THAAD 레이더를 한국 내에 배치하면 북한 지역까지만 탐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 내 무기현황, 배치를 감시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랭크 로즈(Frank Rose)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THAAD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이다”고

20) 홍규덕, “THAAD 배치에 관한 주요 쟁점과 미사일 방어전략,” 『신아세아』 제22권 제4호(신아시아연구소, 2015), p. 123.

21) 모준영,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미국의 전략,” 『민족연구』 제67호(한국민족연구원, 2016), p. 34.

22) 김태우, “북핵 위협과 THAAD 논쟁,” 『북한』 제520권(북한연구소, 2015), p. 58.

강조했다.²³⁾ 이러한 입장은 “THAAD 자체는 중국의 핵억제 태세에 위협이 아니다”라는 중국학자의 언급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²⁴⁾

미국은 미중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어 만에 하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 배치된 THAAD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²⁵⁾ 왜냐하면 미국은 THAAD의 요격 사거리가 200km, 요격 고도가 40~150km 정도인 점을 고려해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사된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1,000km 이상의 고도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미 영토 방어를 위한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²⁶⁾

이러한 미국의 한국 내 THAAD 배치의 이면에는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미일 MD 체제를 포함하는 한미일 MD 체제의 구축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고려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MD 체계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왔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확대하여 아태 지역 동맹국들과도 연달아 MD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었다.²⁷⁾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급성장은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2015년 국방백서에서 근해방어와 원해호위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하면서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미국의 해상 제해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군용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인공섬’을 만드는 동시에 ‘도련(Island Chain)’이라는 가상의 선을 설정했다.

이러한 중국 측의 동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반 중국 동맹’의 확대를 가져오

23) 『동아일보』, 2015년 5월 21일.

24) 박휘락, “미국 THAAD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과 집단사고 분석,”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국가정책연구소, 2015), p. 37에서 재인용.

25) 엄상훈, “우보 전략으로 결정 최대한 늦춰라,” 『신동아』 5월호 (동아일보사, 2015), pp. 285-291.

26) 『문화일보』, 2016년 7월 8일.

27) 정철호, “미국 2012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 『정세와 정책』 2월호 (세종연구소, 2012), p. 25.

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자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중국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언젠가는 자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패권질서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해양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국은 우선적으로 미일동맹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아직까지 동맹관계를 맺지 못한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하면서, 중국적으로는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안보체제’의 구축을 통해 중국의 패권 전략 의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일동맹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으로 하고 그 뒤에 미국-호주 동맹인 엔저스 동맹,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을 보조 축으로 연계하여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전략 구상은 한국 내 THAAD 배치를 통한 미국 MD 체제로의 한국의 참여가 그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THAAD 배치를 통한 한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안보 보장은 최근 미국과 새롭게 안보 협력을 시작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재균형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줌으로써 동맹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²⁸⁾ 특히 미국은 필리핀 및 베트남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51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주둔시켜왔던 필리핀은 1992년 11월 기지사용 협정 종료와 함께 미군 철수를 결정했지만, 2014년 미군의 주둔을 재차 허용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단절되었던 미국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더 나아가 1995년 이후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실현했던 미국은 2014년에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

28) 이병구, “美, 사드 배치 논의 중국 태도 변화 이끌 카드,” 『통일한국』 제387권 (평화문제연구소, 2016), p. 32.

하려는 동남아 국가 간 이해관계의 일치에서 가능했던 것이다.²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에 THAAD를 배치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이에 따른 핵 투발 능력의 다양화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주한미군과 한국의 안보를 안전하게 보장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 방위 공약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미국과 안보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기존의 동맹국 내지 새롭게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중국적으로는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

V. 한국의 선택과 대응

탈냉전기에 들어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 삼아 군사력의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증장거리 미사일로부터 해외주둔 미군과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지역 MD 체계에 편입되었고, 이를 통해 미일안보체제의 일체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그동안 한국 내 THAAD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 해온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해 왔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채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 편입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2006년부터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방침은 한국 내 THAAD 배치 결정과 모순되면서 내적 갈등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갈등을 초

29) 이기완 (2015), p. 339; <http://blog.naver.com/keltis> (검색일: 2015년 4월 24일).

30) 모준영 (2016), pp. 40-41.

래하는 불씨가 되었다. 특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 시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우회함으로써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중국 및 북한과의 원치 않는 외교적 갈등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이었다.³¹⁾ 그런데 문제는 KAMD와 MD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³²⁾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선택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및 북핵 문제 해결에서의 중국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THAAD 배치에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11월 한국의 대중 수출은 총 수출의 25% 정도에 이를 정도로 중국은 한국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는 한국 내 THAAD 배치를 결정하게 되면, 중국이 공언해온 대로 경제적 제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것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은 북한 정권의 체제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북핵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핵 문제는 북미 협상이 아닌 북중 협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THAAD 배치를 결정해도 중국이 외교적으로 한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³³⁾ 전자의 주장처럼 중국이 한국에 대해 공공연하게 경제적 제재를 발동하게 되면 주변국과의 선린우호협력강화라는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를, 주변국에 대해서는 주변국외교 — 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2015년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는 2,759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무역규모가 1,119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던 것은 THAAD 배치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들의 주장처럼 한국 내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31) 김영호, “탄도미사일 방어: 현황과 한국의 선택,” 『국제정치논총』 제50권 제5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p. 162.

32) 『문화일보』, 2016년 7월 8일.

33) 정경영, “THAAD 배치 논란과 한국의 안보,” 『군사논단』 제81호 (한국군사학회, 2015), pp. 67-68.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둔화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³⁴⁾

후자의 경우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최근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말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표방하면서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비밀리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일견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전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중 3국 간 뜨거운 외교적 쟁점이 되지 못했다.

즉,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비장의 카드로 꺼내 들었던 THAAD 배치를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미국의 지역 MD 정책에 대한 편승이라는 측면만을 부각하면서 한국 내 THAAD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 없는 과도한 주권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2015년 9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친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세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일종의 ‘외교적 협력 시그널’이었다.³⁵⁾

하지만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함께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서 과연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단념시킬 의지가 있는지, 또한 중국이 그럴만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중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즉, 한국 내 THAAD 배치 결정은 중국에

34) 쉬창원(徐長文), “아베 총리 집권 후, 한미중일 경제관계분석,” 『중국전문가포럼』, 2016년 9월 30일.

35) 나영주, “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민족연구』 제67호 (한국민족연구원, 2016), p. 50.

대한 한국 정부의 불신이 담긴 ‘외교적 압박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 THAAD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한미동맹의 족쇄에 스스로 결박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알면서도, 종국적으로는 다층 방공망의 구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놓이게 되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THAAD 배치를 결정했던 것이다.³⁶⁾

즉, THAAD가 배치된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MD 체제에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미중 양국에게 전달하고, 특히 중국에게는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전략자산이 그대로 노출되어 국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사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배치할 수밖에 없는 한국 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국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받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한국과 외교적 관계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는 북한의 주장대로 1t 미만으로 핵탄두의 소형화가 가능하게 되고,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 이를 분산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선제과파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으로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조기에 완전하게 파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제2차 보복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북한이 핵무기 투발 능력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이를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THAAD 배치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체계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탄도

36) 이상현·정재홍,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정책브리핑』 제2016-18 (세종연구소, 2016), pp. 16-17.

〈표 4〉 다층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요격미사일	요격 고도	주체	용도
PAC-2	15~20km	한국 운용	3차 방어
PAC-3	30~40km	미군 운용	2차 방어
M-SAM	40km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일환 2020년대 중반 전력화 계획	
L-SAM	50~60km		
THAAD	50~150km	주한미군 운용	1차 방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PAC-2와 PAC-3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하층 낙하단계(50~6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과 요격 고도 40km 이하 저층요격을 담당하는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을 전력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전력화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탄두미사일 공격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³⁷⁾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 내 THAAD 배치 문제는 북한으로부터 초래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채, 이 문제가 마치 미중 간의 패권 논리로 변질되면서 ‘THAAD 딜레마’를 초래했던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막연하게 제기되었던 THAAD의 효용성 문제가 침소봉대되어 한국이 마치 미국의 지역 MD 체제에 편입된 것처럼 말함으로써 중국 측의 주장대로 THAAD 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측을 겨냥하고 있다는 논리로 변질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이 한국 측의 선택을 한층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37) 윤정원, “북핵 위협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세계의 주요 갈등 분쟁의 실태 및 쟁점』(2016년 화랑대연구소 군사연구세미나), p. 26.

VI.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핵위협과 함께 미사일 발사 능력의 지속적인 증대는 지금까지 미중 양국에 의해 추진된 대북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와 핵 투발 능력의 다양화가 한국 내 THAAD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⁸⁾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핵 실험을 계속하라” 또는 “핵탄 적용 수단의 다종화로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과 수중에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하라”며 한미 양국과의 대립국면을 조장하고 있다.³⁹⁾ 더욱이 북한은 ‘핵 우선 사용 원칙(Nuclear First Use Doctrine)’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주장대로 핵탄두의 소형화와 다양한 핵무기 투발 능력 보유 등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제과파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최근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THAAD 등으로는 국가의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여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 후 상승단계, 중간비행단계, 그리고 낙하단계(상층방어단계와 하층방어단계) 등 3차원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뿐만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의 냉각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비용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에게 3차원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배치할 경우에는 중국 측의 반발은 지금보다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 투발 능력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적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핵탄두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38) 『서울신문』, 2015년 2월 25일.

39) 『동아일보』, 2016년 3월 12일.

두 번째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다. 1970년대 중후반에 경험한 바 있듯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과 제재, 그리고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등을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것이다. 현시점에서 핵무기 독자 개발 시도는 오히려 우리의 안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것이며, 그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핵우산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핵우산 정책에는 ‘전술핵 재배치’와 ‘전술핵 배치 없는 선언적 확장억제’ 등이 있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미국이 핵우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 미국-북한 간 핵전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전술핵 배치 없는 선언적 확장억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사시 얼마 정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권이 더욱 줄어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즉, 북한의 핵탄두의 소형화와 핵 투발 능력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북한의 핵위협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한미동맹과 미군의 전략자산에 기대어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안보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거나 북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대칭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열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상대방의 군사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국가 안보에 있어 적에 대한 과소평가는 유사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참고문헌】

- 고성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국가전략』 제12권 제4호 (세종연구소, 2006).
- 구분학.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화.” 『신아세아』 제22권 제4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 김병남. 『안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2011).
- 김영호. “탄도미사일 방어: 현황과 한국의 선택.” 『국제정치논총』 제50권 제5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 김태우. “북핵 위협과 THAAD 논쟁.” 『북한』 제520권 (북한연구소, 2015).
- 나영주. “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민족연구』 제67호 (한국민족연구원, 2016).
- 모준영.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미국의 전략.” 『민족연구』 제67호 (한국민족연구원, 2016).
- 박병광. “中, 한반도 사드 배치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로 인식?” 『통일한국』 제387권 (평화문제연구소, 2016).
- 박휘락. “미국 THAAD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과 집단사고 분석.”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국가정책연구소, 2015).
- _____.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 논란이 갖는 의미.” 『국제관계연구』 제21권 제1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 쉬창원(徐長文). “아베 총리 집권 후, 한미중일 경제관계분석.” 『중국전문가포럼』 2016년 9월 30일.
- 신영순. “THAAD논쟁에 얽힌 허와 실.” 『국가안보전략』 제15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 엄상윤. “우보 전략으로 결정 최대한 늦춰라.” 『신동아』 5월호 (동아일보사, 2015).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중국은 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민감한가?” 『통일경제』 제2016권 제3호 (2016).
- 우정엽. “사드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JPI Peace Net』 제2015-05 (제주평화연구원, 2015).
- 윤정원. “북핵 위협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세계의 주요 갈등 분쟁의 실태 및 쟁점』 (2016년 화랑대연구소 군사연구세미나, 2016).
- 이기완. “동아시아 안보에서의 초국가적 위협.” 『국제정치연구』 제16집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 _____. “THAAD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국제정치연구』 제18집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5).
- 이병구. “美, 사드 배치 논의 중국 태도 변화 이끌 카드.” 『통일한국』 제387권 (평화문제

연구소, 2016).

이상현·정재홍.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정책브리핑』 제 2016-18 (세종연구소, 2016).

이수형. “동맹의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국제정치논총』 제39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정경영. “THAAD 배치 논란과 한국의 안보.” 『군사논단』 제81호 (한국군사학회, 2015).

정철호. “미국 2012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 『정세와 정책』 2월호 (세종연구소, 2012).

홍규덕. “THAAD 배치에 관한 주요 쟁점과 미사일 방어전략.” 『신아세아』 제22권 제4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Mandelbaum, Michael. *The Nuclear Revolution: International Politics Before and After Hiroshim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Rothstein, Robert L. *Alliances and Small Pow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_____.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No. 1 (1990).

Walt, Stephen M.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keltis> (검색일: 2015년 4월 24일).

〈신문 자료〉

『뉴스 1』.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이주신문』.

『연합뉴스』.

『한겨레』.

『헤럴드경제』.

『環球時報』.

[ABSTRAC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Political Dynamics of THAAD Deployment

Ki-Wan Lee |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grounds for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deplo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using the theory of alliance dilemma.

South Korea needs both the strategic alliance with the US and th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It thus had maintained a strategic ambiguity between the two. However, as the struggle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n East Asia intensifies, South Korea is trapped in a 'hostility game' being forced to choose one or the other. This situation no longer allowed South Korea's 'diplomacy of suspended thinking,' which was an outcome of strategic ambiguity.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deploy THAAD is the result of over-concern with the Sino-US relations in the midst of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consequently has led to confusion over the issue at stake.

Keywor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trategic Ambiguity, Abandonment and Entrapment, Alliance, Struggle for Hegemony

투고일: 2016년 10월 7일, 심사일: 2016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23일